

데스크 시각



장필수 제2사회부장 편집국장

지난 4·7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이다.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다. 화제는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였다. 여론기관들이 연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을 때다.

선배는 여론조사는 믿을 것이 못 된다며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뒤졌지만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한 후보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석패했다.

선배의 지적은 부동산 투기 등 내로남불 및 오만과 위선으로 인한 민심 이반의 심각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의아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보수정권은 도덕성이나 정책에 있어 더 많이 실패했는데 왜 사람들은 진보정권만 탓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왜곡됐다면서 박 시장 시절 서울시청 출입자가 쓴 책을 권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해 뉴스를 어떤 경로로 접하는지 물었다. 주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집

‘당심’ 눈치 살피다 ‘민심’을 놓쳤다

작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됐는지. 게다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채널만 보기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똥배’로 불리는 민주당 극렬 지지층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다.

4·7 재보선은 예상대로 집권 여당의 완패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쇄신 논쟁이 불붙고 있다. 초선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은 참패 원인을 ‘민생 외면과 무능’에서 찾고 있는 반면 극렬 지지층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미진한 개혁’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극렬 지지층의 원인 분석을 보면서 그 선배 역시 아직까지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보선 참패 원인 놓고 티격태격

여론조사에서는 35%와 55% 틀이 있다고 한다.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35%를 밑돌면 패배하고 55%를 넘으면 이긴다는 이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들어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선이라는 40%가 깨졌고 3월 셋째 주 들어 35%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부정평가는 3월 첫째 주에 이미 55.7%를 넘어섰고 재보선 기간에는 62%대로 치솟았다. 인물과 정책이 사라진 이번 선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강성 ‘친문’(친 문재인)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쇄신에 나서겠다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에게 탄지를 거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이들은 당내 쇄신과 반성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관행과 오만에 눈감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밝힌 초선의원 다섯 명을 가리켜 ‘초선 5적’이라고 부르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쇄신 없으면 1년 뒤 대선도 위험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지만 강성 친문 당원들이 보여 주는 작금의 행태는 쇄신을 통해 거듭나려는 민주당에게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당심(黨心: 당원들의 마음)과 민심(民心: 국민의 마음)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법 역시 어떻게 당심과 민심 간 괴리를 좁힐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당심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민심 쪽으로 당심을 끌어와야 할 것 같다. 민심이 귀 기울이기보다 당심의 눈치를 보다 참패한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해야만 내일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보선 전까지 선거에서 4연승을 하면서 오만해졌고 민심과도 멀어졌다. 쓴소리를 하는 의원을 탈당하게 만들고 ‘상왕’이라는 전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주창해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11개월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쇄신을 통해 민심을 얻는 데는 그다지 짧다고만 할 수도 없는 시간이다. 오로지 민심을 보고 당의 체질을 바꿔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남은 11개월을 자신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김진구 일선중 교감

재판 내내 소년을 어르고 달래면서 묻고 답변하는 문답식 심리(審理)가 끝나고 잠시 침묵의 시간. 판사의 고개가 좌우로 두어 번 미동하더니 마스크가 부풀려졌다. 한숨이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7호 처분이었다. 6개월간 ‘병원, 요양소 또는 법률상의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조치이다. 대전소년원 부속 의원에 치료 위탁을 하는 것이다. 부속 의원이지만 소년원에 의료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2학년 유미(가명)는 “안 가겠다”고 했다. 치료에 도움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가서 잘해 보겠다고 했다. 애절하게 판사님을 불렀지만 항고하는 방법 외에는 처분이 반복될 수 없다.

유미는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 처분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0호까지 있다. 청소년이라도 중한 범죄의 경우 소년 형사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이 소년을 도울 수 없을까요

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유미가 받은 7호 처분은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오남용을 한 경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때 내리는 위탁조치’이다. 비행이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이나 국립 나주병원 등에 위탁하고, 비행이 반복되고 치료와 함께 감호가 필요하다면 대전소년원 부속 의원에 위탁한다.

감호실무관과 함께 유미를 데리고 법정에서 나왔다. 대기실에서 유미의 마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오른 쪽 팔뚝은 붓대를 감았고, 왼쪽은 자해의 흔적들로 검붉다. 옆에는 이송 과정의 보호 장비인 포승(捕繩)도 보였다. 간혹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조금 나아진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분노조절 장애가 매우 심해서 대전소년원은 두 번째이고, 국립 나주병원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번에 광주분류심사원의 한 달 위탁 생활 중에도 몇 번 자해를 시도해서 많은 관리자들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부모와 어른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 사회적 피해 의식은 소년 스스로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유미는 태어나자마자 광주에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모친과 간혹 연락이 되었으나 그 후로는 단절되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감정 기록이 심해졌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이때부터 ADHD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분량을

늘려도 큰 효과가 없다. 11살 때 환경 변화를 주기 위해 전남 지역의 아동치료 복지시설로 옮겼다. 그러나 비행과 소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의지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는 3년 후인 스무 살까지 살 수 있다. 특수학교 재택 학습에 학적을 두고 주 2회 순회 교사의 수업을 받고 있다. 상황 파악과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평안하면 운순하다. 손재주가 좋아서 바리스타가 꿈인데 대전소년원 6개월 이주가 격정이다.

손톱이나 흉기로 자해를 반복하고, 몸집이 큰 교사도 제지하다가 인대가 끊어지고, 욕상으로 올라가고, 물어뜯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상당수가 지치거나 자괴감으로 사표를 냈다. 함께 생활하는 소년들은 무섭다고 다른 시설로 옮겨 달라고 한다. 치료시설이나 병원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받기를 꺼려한다. 이렇게까지 개인의 상처를 드러낸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작년 말 어느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소년이 보호 종료 나이가 되어 퇴소를 앞두고 욕상에서 뛰어내렸다. 소년의 죽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슬퍼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의료인, 상담 전문가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본다. 예견이 되면 예방하는 것이 좋은 사회 아닌가. 판사님도 오셨으면 한 번 보냈던 대전으로 또 보냈겠는가. 아픈 이 소년에게 어른들의 지혜와 자비로운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훗날 유미가 내린 커피향이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퍼지기를 바란다. 기적처럼.

선동열 vs 허구연

까?” “어푸어푸, 아니오!” 그러자 뱃사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 전체를 잃게 되었군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니 뭐니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장평(?)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많이 알고 유능해도,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의를 교육에도 이론과 실제, 경험과 지식,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논하는 중요한 주제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이야기는, 인생을 논하는 서민들의 술안줏감보다도 더 중요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다.

따뜻한 봄과 함께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은 국보급 투수로, 불펜에서 똘똘 풀어도 상대 팀이 별별 떨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선수이다. 야구해설가 허구연은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감독 등 오랜 세월 야구를 지켜보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명해설가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야구의 묘미를 전해 주고 있다. 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할 수 있다’의 영역이고, 후자는 ‘야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영역이다.

스포츠 구단주가 감독을 선임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여길까? 현역 시절 성적을 잘 낸 유명한 선수 출신을 선호할까, 명성은 부족했지만 덕과 지략을 갖춘 박항서 선수 같은 이를 더 선호할까? 그 결과는 승률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교육의 영역에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인구가 쌓아 올린 소중함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물론 이런 논의는 두 영역 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논리로 얼버무리지지만, 실제 구단주의 처지에서는 매우 심각한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실기나 선수 출신 교사가 수업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할 수가 있는 것’과 ‘가르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는 나의 부단한 성찰과 노력으로 일정한 경지에 다다른 결과이고, 후자는 배우는 자의 준비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고려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할 수 있다’는 덕목을 갖추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덕목을 갖춘 이들이다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잘 안다’는 덕목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 전문성의 핵심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청출어람(靑出於藍)에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수많은 선동열과 허구연, 박항서가 번의 아니게 흘러 나와 의문의 1패씩을 주고받으며 ‘이론과 실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그녀저나 올해 KIA 야구가 개운한 경기를 많이 보여줘서, 코로나 스트레스를 확 날려 주면 좋겠다.

社說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오염수가 이르면 한 달 이내에 전남 앞바다까지 흘러들 것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10월 국내외의 반대에도 부딪쳐 오염수 방류 방침을 보류했던 일본 정부는 어제 각료회의에서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의 농도가 미량일 경우 한 달 내에 앞서고 2년 뒤 해양 방류에 나서게 된다. 해당 오염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모인 양만 약 125만 톤에 이른다.

그런데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법적인 제재까지 엄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웃 국가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

적인 행위일 뿐이다. 게다가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으로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기가 어렵고,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오염수가 이르면 한 달 이내에 전남 앞바다까지 흘러들 것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받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때 세슘 등 핵종물질(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의 농도가 미량일 경우 한 달 내에 서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수산물 생산 기지인 전남 지역 어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법적인 제재까지 엄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웃 국가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

출범 앞둔 자치경찰위 벌써부터 잡음이나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추천 위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게다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시장 추천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각 2명,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각 1명씩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때 최근 광주시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중 2배수인 네 명을 선발했으나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번호자를 배제해 입찰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배제된 후보를 추천해 불가피하게 후보자를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성을 지킨다며 공개 모집을 해놓고 번호사리는 이유로 1위를 배제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이 번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자치경찰의 중요 임무 중 한 축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등이므로 이에 걸맞게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위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권을 가진 조직마다 그저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거하는 방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명심보감 성심 편에 ‘국정청심은 관청 민자안’(國正天心順 官淸民自安)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라가 바르면 천심이 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스스로 편안하다는 뜻이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며 이 글귀를 떠올렸다.

현 정부와 여당이 4년 만에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서 쇄신과 혁신의 기로에 섰다.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LH(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꼽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각종 개혁 입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혁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또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당규를 무리하게 변경까지 해 가며 서울·부산 시장을 공천한 것도 민심이 불어선 이유다.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전셋값 인상 소식 역시 민심 이반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는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내로남불’을 일삼는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

는 더욱 커져만 갔다. 공정과 도덕성을 앞세웠던 정권이었던 만큼 이들의 티끌만 한 잘못도 국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와 여당에 적용하는 도덕성의 잣대는 그만큼 엄밀할 수밖에 없었다.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여당과 현 정부가 쇄신과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쇄신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왜 돌아서게 된 것인지, 앞으로 민심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각종 개혁 입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혁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이름으로 국민 간의 갈등과 피로감을 더욱 키운다면 한번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호남 사람들이 현 정부에 완전히 돌아선 타 지역 민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훗날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결코 기억하기 어렵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